

순천 보선 ‘무공천’ 해법 못찾는 민주

최고위 결론 못내 ... 박주선 “민주 포함 경쟁하되 다른 당엔 가점”

조순용 ‘무소속 출마’ 압박... 분당 을 후보난 고민도

민주당이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 방정식을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후보 난까지 겹치고 있어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심야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무공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순학규 대표는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의 기반을 만들려면 어떤 형태로든 순천에서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 거듭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주선, 천정배 최고위원 등은 “무조건 양보는 안 된다”며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무공천 보다는 민주당 후보도 포함하는 경쟁방식을 취하되 다른 야당에 가점을 주는 야권연대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동영, 정세균, 조배배 최고위원과 박지원 원내대표 등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순천 무공천 문제를 포함해 ‘3+1’(분당+순천+김해+강원지사) 전체 후보에 대한 일괄타결을 목표로 손 대표와 야권연대 협상 대표인 이인영 최고위원에게 협상권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통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순

천 무공천 문제의 장기화 배경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 무공천 문제의 장기화를 방지, 야권연대의 동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순천에서의 무공천을 통한 야권연대는 이날 중순에나 가닥이 잡히고 야권 내부의 경선 등이 이뤄질 경우, 이달 말에야 후보를 선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공천을 통한 순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야권연대 결과와 실패로 나올 경우, 정치적 타격은 이를 주도한 손 대표가 입는다는 점도 순천 무공천 방정식에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일부 예비후보들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의 압박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 전남 시민사회단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연석회의 주장까지 겹치면서 순천 무공천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좀처럼 필승 카

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외부 영입 인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나 대부분 고사하고 있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내외에서는 순학규 대표의 ‘구원 등판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순천 무공천 문제와 경기 성남 을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중순에나 가닥이 잡힐 전망”이라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순학규 대표, 박주선·정세균 최고위원(왼쪽부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순군수 후보 이달말까지 공천”

민주, 전직 군수를 재판결과 후 배제 여부 결정

민주당은 4·27 화순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군수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9일 “오는 16일과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예정된 임호경·전형준 전 군수의 재판 결과를 보고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가능한 빨리

공천해 후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두 전직 군수의 출마가 유력시되는데다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세력이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의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16일로 예정된 임호경 전 군수의 재판은 선고기일이 아닌 변론기일이어서 임 전 군수의 1심 선고 결과는 늦어질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후보를 공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부부군수’와 ‘형제군수’ 집안간의 해묵은 대결과 소송 등으로 지역이 극심한 갈등이 얼룩졌고,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난 여론을 고려해 공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행정가 출신인 배동기 전 화순부군수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발을 누

비고 있으며, 홍익식 전남도 의원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도의원을 사퇴해야 함에 따라 중앙당에 공천신청만을 해 놓은 상태다. 또한, 전형준 전 군수와 임호경 전 군수, 구충곤 전남도립대 총장, 이운보 전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래 동북조합장 등 5~6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중앙당 고위관계자는 “지금 거론되는 예비후보 외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광주시의회, 리비아 민주화 지지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9일 리비아 국민들의 민주화 혁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리비아 카다피는 42년간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억압해 왔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을 무차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카다피 독재정권은 민간인 학살과 유혈 진압을 중단하고 리비아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화를 이행할 것을 광주시민과 함께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리비아 국민의 용기 있고 정의로운 항쟁으로 반드시 민주화가 이뤄질 것임을 확신하며, 리비아 국민의 민주화 혁명을 전 국민과 함께 지지한다”고 말했다.

매점·자판기 장애인 등 우선 조례 가결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시 교육청이 산하에 설치된 매점과 자판기를 장애인과 노인,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우선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 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 교

육청 산하 기관(공립학교 포함)은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 계약을 할 때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곤 위원장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의무를 다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군용 비행장 이전 대책위 발족

광주 공군 비행장 이전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대책위(이하 대책위) 준비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대책위는 민주당 광주시당 광산 갑·을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광산구가 지역구인 김동철·이응섭 의원, 서구 조영택 의원, 광주시의회, 광산구의회, 서구의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광산구와 서구, 시민사회단체 등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범 시민 조직으로 꾸려진다. 대책위는 앞으로 시민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전개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봉근 준비위원장은 “정부에 광산구민과 광주시민의 군용비행장 이전에 대한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범시민적 대책위를 가동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3월 임시회도 ‘의원 잇속 챙기기’?

민생 뒷전 ... 공직선거법·사학법 개정